전북경제 활성화 '총력전'

전북도 경제기관, 기업유치 · 일자리창출 '올인'
민생경제원탁회의 개최… 시책 공유 · 현안 토론

전북도는 26일에 한국은행전북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전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를 이원택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개최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 ·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49개 회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공유와 기관 간 협력사항 논의 및 전북 상생형 일자리 등 최근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2019년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 전망과 도내 경제지표 현황을 분석하여 전북경제 활력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차 민생경제 원탁회의의 기관별 협조 요청건에 대해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으로 전북지방환경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협조에 대해서는 전북도는 81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의한 국도 77호선상의 부안~고창(가칭 부창대교) 도로건설이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공동대응을 요청과 관련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3월 28일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방문 및 4월 8일 국토부를 방문 강력 주문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협조요청에 따라 도내 향토기업과 제로페이 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까지 기업제품 상표라벨 1,420만개 제로페이 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하고 있다.

기관별 주요 추진시책 내용으로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 부처반영액이 6조 307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8억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하고 기재부 ·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지엠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한 MS컨소시엄 모델과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공공주도 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새만금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글로벌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에 기관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라북도 투자 인센티브 지원확대와 산업위기지역 자동차 · 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제도를 설명하고 기업유치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도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 인구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에서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시 및 홍보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창업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관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 · 동진강 자전거길 순환벨트 조성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지원 및 농어촌공사시행 항로준설 적기 추진, 2020년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확보 공동대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전북지방조달청은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청년친환형 청년센터 활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강화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지구 조성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안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각 기관별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 전북 발전의 대도약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전북 경제가 만들어지도록 각 기관에서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20년 동부권 시군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전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가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전북 동부권발전위원회 열려
국가사업 발굴 추진 관련 논의

전북도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20년 동부권 시군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7기 동부권 위원회는 관계 실 · 국장 및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동부권 6개(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와 의결, 전문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 이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와 2020년 추진 예정인 16개 특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추진상황보고에서 동부권 특별회계 재원을 2020년부터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 확대와 연계하여 분야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이후 적용할 것이며,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혁신형 국가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시군의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날 논의된 사업은 총 16개로 식품 분야 8개 사업, 관광분야 8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에는 총 400억 원(도비 300억, 시군비 96억, 자부담 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진안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무주 부남 금강변 및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순창 발효 ·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6개 사업은 동부권 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최용범 행정부지사(위원장)는 "앞으로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동부권 지역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여 동부권지역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6개 시군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부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달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선박자동식별장치 필수 설치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 의무화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EPIRB,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1회 위반/영업정지 1개월, 2회/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참고로, 전북도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총톤수 5톤 이상)은 총 149척으로,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유예(기존 2019.7.1.)했다. 또한, 기존에 여객선과 유 · 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태풍 내습 시 '현장정보 수집반' 시범 운영

전북도가 올해 태풍 내습 시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재난 및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현장정보 수집반'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정보 수집반' 시범 운영은 태풍 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경우 공공의 대응인력과 영상정보 수급에 한계가 있어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으로 민관협력 기반 재난현장 영상정보 수급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것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태풍 시 신속하게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에 연계하여 재난상황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장정보 수집반'은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스마트폰과 어플 활용이 가능한 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운영하며 촬영된 영상물을 어플을 통해 전송하면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 입력되고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지도기반 시스템 표출정보로 제공되어 재난상황 판단과 대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반'에 대한 설명회와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교육을 6. 25일 전북도청에서 실시했고, 금년 여름철 태풍 내습 시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민원수수료 납부 카드 · 인터넷 체제 전환

내달부터 종이 수입증지 폐지

전북도는 2019년 7월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대체 한다.

이는,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청 · 서의 총포 · 화약 민원처리(신규/갱신)를 위해 도청에서 종이증지를 구매하였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조례를 5월에 전면개정 하였고, 7월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를 도입하였으며, 인터넷(위택스)으로 민원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입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부자 시각에서 다각도로 관련 정책을 고민한 결과이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민원 서비스가 관공서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입장으로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판매되어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원할 경우 도청에서 절차를 통해 환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